제 1 장 산 업 정 책

제 1 절 2003년 산업동향

1. 2003년 산업동향

산업정책과 윤요한 사무관

가. 경제동향

IT부문의 과잉투자 해소 과정에서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2001년에는 3.0%의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에는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경제 또한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여 6%대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반면, 2003년 우리경제는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다만 3/4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대중국을 포함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Ⅳ-1-1〉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1/4	2/4	3/4	4/4	연간
실질GDP(%)	3.1	6.3	3.7	1.9	2.3	-	-
·민간소비(%)	4.7	6.8	0.7	△2.2	△1.9	-	-
·건설투자(%)	5.3	3.3	8.1	7.2	7.8	-	-
·설비투자(%)	△9.6	6.8	1.6	△0.8	△4.7	-	-
수 출(억불)	1,504	1,625	430	461	478	569	1,938
증 가 율(%)	(△12.7)	(8.0)	(20.7)	(14.4)	(15.9)	(25.6)	(19.3)

나. 산업활동 동향

2003년도 주요산업의 생산은 전반적인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철강·자동차·일반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 및 IT산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자동차·섬유산업의 내수는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표 Ⅳ-1-2〉 주요업종별 생산·내수·수출실적

업 종	구 분	단 위	2002	2003	증감률(03/02,%)
자 동 차	생 산	만대	315	318	1.0
	내 수	만대	162	132	△18.8
	수 출	백만불	14,780	19,020	28.7
조 선	건 조	만CGT	682	720	5.5
	수 출	백만불	10,870	11,340	4.3
철 강	생 산	천톤	51,676	53,320	3.2
	내 수	천톤	43,711	45,582	4.3
	수 출	백만불	7,070	9,180	29.8
일반기계	생 산	십억원	48,202	50,147	4.0
	내 수	십억원	48,228	50,669	5.1
	수 출	백만불	12,502	15,242	21.9
가 전	생 산	십억원	22,004	23,412	6.4
	내 수	십억원	12,302	12,327	0.2
	수 출	백만불	10,760	12,497	16.1
반 도 체	생 산	백만불	20,125	21,840	8.5
	내 수	백만불	20,968	23,940	14.1
	수 출	백만불	16,631	19,500	17.2
정보통신	생 산	십억원	47,396	56,002	18.2
	내 수	십억원	28,664	30,384	6.0
	수 출	백만불	28,057	35,243	25.6
화 섬	생 산	십억원	40,028	39,027	△2.5
	내 수	십억원	28,041	26,779	△4.5
	수 출	백만불	15,674	15,190	△3.1
중전기기 ·전 선	생 산	십억원	8,875	9,345	5.3
	내 수	십억원	9,822	10,473	6.6
	수 출	백만불	2,285	2,519	10.2

자료 : 산업자원부

2. 설비투자

산업정책과 윤요한 사무관

주요업종별 매출액 상위 2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도 설비투자실적은 전년대비 22.1% 증가한 29조 5,4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조업중심의 대기업 투자증가는 수출호조 영향에 일부 IT업종의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선도적인 투자를 실행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73.4%)는 하반기 이후 IT 경기의 점진적 회복 및 수출호조세 등으로 생산증가를 위한 기존설비확장 및 설비유지보수에 대폭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조선(43.5%)은 수주량 급증 및 LNG운반선 등 선박대형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항공(△27.9%)은 이라크전 및 SARS 등에 따른 여행객 급감으로 항공업계 경영이 크게 악화되며 전년에 비해 설비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철금속(△23.6%)도 전년에 이미 일부 제련업체들의 설비증설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목적별 투자동향을 보면 신제품생산, 설비확장 등 생산투자 뿐 아니라 R&D·정보화 투자도 큰 폭 증가하여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재원별로는 주식, 회사채 등 직접금융과 은행차입을 통한 간접금융 비율이 낮아진 반면, 기업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내부유보에 의한 재원조달이 큰 폭 증가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한국은행 및 통계청의 통계와는 달리 제조업중심의 200대기업설비투자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대기업·중소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종간 설비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 및 내수경기 침체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Ⅳ-1-3〉 200대 기업 설비투자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업 종	02(실적)	03(실적)	03/02(%)
일반기계	5,175.8	6,932.2	33.9
항공	2,828.0	2,038.0	△27.9
자동차	19,048.2	27,204.1	42.8
조선	5,970.2	8,566.0	43.5
철강	19,714.9	16,730.8	△15.1
비철금속	2,725.0	2,082.2	△23.6
석유화학	8,974.6	10,859.4	21.0
반도체	44,786.0	77,637.2	73.4
전자부품	23,854.7	28,362.6	18.9
정보통신	4,052.4	4,536.8	12.0
가전	3,055.2	3,901.3	27.7
중전기기	930	972.2	4.5
섬유	3,450	4,638.3	34.4
신발	367.6	156.5	△57.4
정밀화학	3,910	4,647.8	18.9
타이어	2,508.4	3,504.3	39.7
제지	739.7	757.1	2.4
시멘트	2,059.0	2,142.0	4.0
제조업계	154,149.7	205,668.8	33.4
에너지	74,875.4	77,483.8	3.5
유통	13,025	12,331	△5.3
합계	242,050.1	295,483.6	22.1

자료 : 산업자원부

3. 고용 및 임금

산업혁신과 조영길 서기관

2003년 경제활동인구는 22,916천명으로 전년대비 39천명(0.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61.4%로 나타났다.

2003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22,139천명으로 남자는 13,031천명으로 0.8%증가하였고, 여자는 9,108천명으로 1.3%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1%로 나타났다. 2003년 실업률은 3.4%로 전년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실업자는 777천명으로 전년대비 69천명(9.7%)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7천명으로 4.3% 증가하였고, 여자는 290천명으로 20.3% 증가하였다.

〈표 Ⅳ-1-4〉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 분	2001	2002	2003
○경제활동인구	22,417(2.1)	22,877(2.1)	22,916(0.2)
○취업자	21,572(2.4)	22,169(2.8)	22,139(△0.1)
남자	12,581(1.8)	12,944(2.9)	13,031(0.8)
여자	8,991(3.2)	9,225(2.6)	9,108(△1.3)
○제조업	2,495(3.2)	2,508(0.5)	2,650(5.7)
○참가율	61.3	61.9	61.4
남자	74.2	74.8	74.6
여자	49.2	49.7	48.9
○실업률	3.8	3.1	3.4
○실업자	845(△4.9)	708(△16.2)	777(9.7)
남자	561(△6.0)	467(△16.8)	487(4.3)
여자	284(△3.1)	241(△15.1)	290(20.3)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제조업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003년 전산업의 임금상승율(총액기준)은 전년평균대비 9.2% 상승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8.7%,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0.4%,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은 8.9%, 상승하였으며,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13.8%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Ⅳ-1-5〉 산업 대분류별 임금총액 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구 분	2001	2002	2003
전 산 업	1,752	1,948	2,127
	(5.1)	(11.2)	(9.2)
제 조 업	1,659	1,857	2,018
	(5.9)	(11.9)	(8.7)
전기·가스 및 수도업	2,835	3,206	3,649
	(15.3)	(13.1)	(13.8)
건 설 업	1,687	1,859	2,072
	(△0.8)	(10.2)	(12.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619	1,784	1,941
	(9.8)	(8.0)	(12.7)
운수·창고·통신업	1,777	1,926	2,126
	(1.9)	(8.4)	(10.4)
금융·보험·부동산및사	1,994	2,201	2,397
업서비스업	(5.1)	(10.4)	(8.9)
교육·보건·사회및개	1,817	2,043	2,218
인서비스업	(2.7)	(12.4)	(8.6)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 2 절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의 추진

산업정책과 양병내 사무관

1. 개　요

'80～'90년대의 한국경제는 요소투입형(factor & investment driven) 성장을 이루었는데,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요소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률은 1980년대 78%, 1990년대 84% 내외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8%에서 90년대 6.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자본생산성 저하 등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좌우할 전망으로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한 대부분 국가들의 중장기 성장률의 변화는 요소투입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의해 주도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도 혁신과 지식창출에 기반을 둔 사회하부구조를 구축하여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Ⅳ-1-6>　　혁신주도형 발전전략과 잠재성장률

	기간	성공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0%)	실패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
잠재성장률	2003~07년	5.4%	4.8%
	2008~12년	5.1%	4.5%

자료 : KDI

2. 이론적 배경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은 '90년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advantage of nations)' 개념에서 비롯되었는데, 포터는 ① 노동·천연자원에 의한 요소주도형 경제(factor-driven economy), ② 자본투자주도형 경제(investment-driven economy), ③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 ④ 기존 자산에 기초한 소비의존형 경제(wealth-driven economy) 등 4단계의 국가경쟁력 발전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 자본투자주도형 경제발전단계에 와 있으며,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단계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이클 포터는 국가혁신역량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산업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 고급·전문적인 혁신투입요소의 이용가능성, ② 지역內 경쟁여건의 조성, ③ 클러스터內 생산제품의 질적 수준에 민감한 고객 및 수요의 존재. ④ 클러스터內 수직적·수평적 관련 산업의 존재 유무 및 연관성 제고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핵심은 국가혁신역량(national innovative capacity)을 여하히 제고하느냐에 있는데, 일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기술혁신 정도에 좌우되는 반면, 기술혁신은 또한 '국가혁신역량'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가혁신혁량은 장기적으로 혁신기술의 흐름을 창출하고, 상업화(commercialize)하는 정치적·경제적 실체(entity)로의 국가능력을 의미한다.

3.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기본방향

21세기의 생존 및 발전전략으로서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은 결국 국가전체의 혁신역량 제고가 핵심으로, 이론적 모형을 종합할 때, 국가혁신역량의 확대를 위해서는 ① 공통혁신인프라 구축(common innovation infrastructure), ② 클러스터 고유의 혁신환경 개선(cluster-specific innovation environment), ③ 양자간의 연관성(quality of linkage) 제고 등이 중요하다.

먼저, 공통혁신 인프라 구축의 경우 해당 경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제고와 과학기술인력의 이용가능규모 확대가 중요하고, 아울러 교육·훈련 투자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개방 확대, R&D에 대한 조세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강조된다.

둘째, 클러스터內의 혁신환경 개선은 투입부문의 강화, 기업전략의 전환 및 국내경쟁여건의 개선 등이 중요한데, 인적자원·기초연구·정보인프라·벤처캐피탈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내공급자·관련기업을 포함하는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대외 수입과 외국인투자를 국내 소비자의 안목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혁신 유인을 제고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통혁신인프라와 클러스터 고유의 혁신환경간에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중추적인 혁신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기관간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3대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주력기간산업, 미래전략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군별로 각 산업군의 특성을 감안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주력기간산업은 'Global Top 지향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생산공정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기술개발 능력 등 취약분야를 보완하고, 세계일등 상품·기업을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핵심기술개발, IT·BT·NT 등 신기술과의 접목, 인재양성 및 무형자산의 확충을 통해 세계일류화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미래전략산업은 '기술선점, 조기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IT·BT·NT 등 신기술 분야는 지식 집약적 성격으로 限界遞減의 原理가 아닌 "勝

者가 모든 것을 차지"(A winner takes all)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감안하여 과거와 같은 학습과 모방에 의한 추종(Catch-up) 전략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 선진국이 신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인력 및 기술 인프라 수준이 앞서 있고, IT·BT·NT 분야는 상호연관성이 높고 장기간의 투자 재원을 필요로 하며,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활용분야에 대한 기술 로드맵(roadmap)을 작성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과 기술개발 선점 경쟁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조기에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지원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우는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통·물류·e-비즈니스 등 제조지원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인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아웃소싱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조지원 서비스 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 및 기술·지식 집약도를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요기업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제 3 절 매력적인 기업경영환경 조성

1. 기업규제 개혁

산업정책과 김윤기 사무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최초의 법정 규제개혁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도 기업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신설규제 억제를 위한 규제등록·심사제, 규제영향평가, 규제일몰제 등의 제도적 틀을 갖추고 '98년 이후 약 6,100여건의 규제를 철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표 Ⅳ-1-7〉 규제변화 현황('04.3)

최초 등록규제수('98.8말)	증가	감소	현행 등록수
10,717건	3,303건	6,198건	7,822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업들이 느끼는 기업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핵심 규제,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 획일적 규제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산하 기관의 중복규제, 규제 일선기관의 관료주의적 행태도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 규제와 관행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01년에 이어 '03년 상반기에 전국 31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동 조사를 통해 222건의 기업규제 및 정책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108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 외투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완화(7월), 경차규격 확대('08년부터) 및 경유승용차 내수판매('05년부터) 허용결정 등

토지이용, 환경 등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 출범을 맞아 그간의 양적 규제개혁에서 질적 성과를 제고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기업규제개혁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등도 아직도 규제개혁을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업규제 개혁은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세계 일류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만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업규제 개혁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에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철폐하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의한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활성화

산업정책과 권순선 주무관

외환위기 이후 시장중심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1999년에 「산업발전법」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가 도입된 이래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은 2003년 12월말 현재 누계로 약 4조5천억원(추정)을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제도 도입이래 총 139개 CRC가 등록하였고, 이중 85개사가 등록을 자진반납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어 2003년 12월말 현재 54개사가 활동중이며 평균자본금은 523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동안에 CRC조합은 총 144개가 결성·등록되었고, 이중 86개 조합이 해산하거나 철회되었으며 현재 58개 조합이 활동중이다. 이들 조합의 총 출자금액은 9,340억원에 이르고 조합의 평균출자금은 161억원에 달한다. 이는 민간자율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금년도 조합결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산운용시 위험회피, 안정성 등을 중시하며 주로 채권과 상장주식 매입에 치중하던 우리 나라 최대 연금인 국민연금이 4개 CRC조합에 1,200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CRC조합 출자를 유도하여 조합의 대형화 및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1-8〉 CRC 등록현황 (03.12월)

등록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회사 수(개)	4	10	13	15	12

〈표 Ⅳ-1-9〉 CRC 자본금 현황 (2003.12월말)

구 분	총 계	순 수	신기술	창투사
회사수(개)	54	30	10	14
자본금평균	523억원	73억원	2,226억원	271억원

〈표 Ⅳ-1-10〉 기업구조조정조합 현황 : 58개(2003.12월말)

등록된 조합의 수	총출자금(평균 출자금)
58개	9,340억원(161억원)

〈표 Ⅳ-1-11〉 CRC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연도별 투자실적(2003,12월말)

(단위 : 억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추정)	누계(추정)
C R C	1,622	4,975	13,914	6,793	3,000	30,304
조 합	1,226	2,957	2,718	5,232	2,500	14,633
합 계	2,848	7,932	16,632	12,025	5,500	44,937

CRC제도 도입이래 현재까지 CRC 및 CRC조합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약 4조5천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한 투자유발액은 12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CRC의 이러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 정리와 1999년말 700여개사에 달하였던 법정관리·화의기업이 2002년말 300여개사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CRC의 이와 같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CRC가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2004년 5월 일몰예정이던 CRC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였고, 금년말로 폐지되는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사항 대부분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6년말까지 연장하였다. 그리고, CRC의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부실채권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외에 기업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보유기한을 현행 5년에

서 7년으로 연장하였다. 최근 상시 기업구조조정 또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전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에서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어 자체 신용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인 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기업을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의 CRC의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CRC의 주가조작, 전업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CRC가 구조조정 시장에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2003년 한 해 동안 주가조작, 전업의무 위반 등으로 증권거래법 또는 산업발전법을 위반한 3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또한 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CRC의 등록요건에 물적시설 보유의무를 추가하고, 시장과 투자자에 의한 CRC의 건전성 감독과 투명하고 적법한 경영활동 유도를 위해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CRC에 재무재표와 감사보고서의 공시의무를 부과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CRC가 「상시구조조정시스템」 구축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CRC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전문성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CRC의 자율·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CRC가 부실기업의 인수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제도적·관행적 애로요인의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지금까지 CRC 및 조합이 이루어 낸 투자성과 및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CRC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참여를 독려하여 CRC 및 조합의 대형화·전문화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3.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

산업구조과 박현종 사무관

가. 산업기반자금 운용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조성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물류·입지·환경 등 산업기반 구축에 중점적으로 융자·출자지원되고 있다.

2003년도 산업기반자금의 융자사업을 구분하여 보면, 첫째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정밀화학, 생물·의약, 생활레져 분야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950억원

둘째 대구경북지역의 섬유산업, 부산지역의 신발산업, 광주지역의 광산업, 경남지역의 기계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사업에 578억원

셋째 유통전문상가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을 건립지원하는 유통합리화, 산업단지입주 및 산업집적 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활성화,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산업정보화기반구축의 4개부문으로 구성되는 산업인프라구축사업에 2,05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Ⅳ-1-12> 2003년도 산업기반자금 지원계획

(백만원)

항 목		2003계획 (A)	2003실적 (B)	증 감 (B-A)
운 용 규 모		363,100	363,100	-
지 출	1. 융자사업	358,100	358,100	-
	○신성장산업발전	95,000	95,000	-
	- 부품소재산업육성	45,000	44,046	△954
	- 지식기반산업발전	50,000	50,954	954
	○지역산업균형발전	109,800	57,800	△52,000
	○산업인프라구축	153,300	205,300	52,000
	- 유통합리화	46,800	46,800	-
	- 산업단지활성화	69,000	129,000	60,000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27,500	22,500	△5,000
	- 산업정보화기반구축	10,000	7,000	△3,000
	2. 출자사업	5,000	5,000	-

또한, 출자사업은 2002년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에 50억원을 출자 지원하였다.

나. 융자사업

(1) 신성장산업발전사업 (2003년도 예산 : 950억원)

신성장산업발전사업은 우리 산업구조를 선진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식기반산업발전 등 2개 부문에 지원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원은 국내 산업 중 가장 경쟁력의 취약한 부문인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수출효자산업으로 육성하고 부품·소재분야의 우량 중견기업들을 새로운 핵심 산업조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식기반산업발전 지원은 정보·기술 등 지식의 활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새로운 고용창출이 전망되는 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정밀화학, 생물·의약, 생활레저 등 지식기반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⑵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 (2003년도 예산 : 578억원)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은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점으로 육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산업발전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 및 대체산업의 부재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이러한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1단계 사업은 산업침체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대구경북 섬유산업, 부산 신발산업, 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산업 등에 우선 추진하고 있다. 2단계사업은 2003년부터 대전 바이오·고주파부품산업, 충북 보건의료·전자정보산업, 충남 디스플레이·영상미디어산업, 전북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전남 바이오·신소재산업, 제주 바이오산업, 울산 자동차부품·정밀화학, 경북 전자정보산업, 강원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등에 신규 9개 지역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⑶ 산업인프라구축사업 (2003년도 예산 : 2,053억원)

산업인프라구축사업은 유통·물류, 산업입지, 환경, 산업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통합리화, 산업단지활성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구축, 산업정보화기반구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의 대동맥으로서 유통물류기능의 활성화는 생산자의 매출증대와 비용절감 그리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유통산업은 구조적인 취약성, 높은 요소비용 등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유통합리화 지원은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유통정보화 및 도심의 노후상가단지의 집적화·전문화를 위해 지원되는 전문상가단지건립 지원 등 유통부문 지원사업과 일관수송체계 확립을 위한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 및 물류 거점시설인 공동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센터 촉진지구 건립지원 등 물류부문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산업단지활성화 지원은 현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별기업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청정생산시설 및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부문에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 지원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투자지원 사업, 환경설비를 직접 제작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환경설비산업육성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산업정보화기반구축 지원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정보화 수준이 결정하고, 특히 산업부문의 정보화가 국가정보화를 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도입하는 기업 및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출자사업

동 사업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사업으로서 전문투자조합에 외국계 자본의 출자를 유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로도 활용하고 투자된 재원은 우수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2003년말 현재 3개 조합에 150억원을 출자완료하였다.

라. 향후 방향

나아가 본 산업기반자금을 더욱 확대하여 향후 우리산업을 이끌어갈 새

로운 성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산업기반성격의 기간산업으로서 고비용과 장기투자로 인해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산업분야에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제 4 절 제조업공동화 대응

산업정책과 오승철 사무관

최근 중국에 대한 제조업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경제에 제조업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래 공동화(hollowing-out)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기 보다 매스컴 용어로서 주로 일본에서 제기되었다. 학문적으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내·외부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고용 비중이 줄고,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을 의미한다.

탈공업화와 제조업공동화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되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탈공업화는 산업구조 고도화 결과로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이, 제조업공동화는 해외이전의 급증 등 외부충격으로 급격히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우리경제의 제조업공동화 우려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정확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조업공동화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① 제조업의 GDP비중 ② 해외투자규모 ③ 해외생산(매출) 비율 ④ 무역수지 및 역수입 비율 ⑤ R&D 등 핵심역량 이전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제조업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9% 수준으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최근은 물론, 이들 국가의 소득이 1만불인 시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80년에 28.2%, 미국은 77년에 22.8%, 영국은 82년에 23.7%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아직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2년말 기준 GDP대비 해외투자잔액이 한국은 9.1%인 반면, 개도국 평균 13.5%, 선진국 평균은 24.4%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Ⅳ-1-13> 제조업 해외투자 추이

(억불, 증가율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체	16.6(△28.4)	14.3(△13.9)	37.5(162.2)	15.5(△58.7)	17.6(13.6)
對중국	2.9(△50.8)	4.6(58.6)	5.4(16.5)	7.8(47.2)	11.2(42.5)

다음으로 2002년도 기업의 국내매출대비 해외매출비율을 추정한 결과 12.7%로서 일본의 37.2% 보다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원·부자재 등의 수출이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을 크게 초과하여 해외투자는 무역흑자를 발생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분석에 의하면 2002년 對中 무역흑자(63.5억불)의 55%가 국내기업과 현지기업간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 법인의 경우 대부분 신제품 개발 등 R&D는 국내 모기업에서 수행하며, 현지법인의 R&D는 주로 현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제품개량 및 디자인개발, 기술표준 연구, 현지 생산제품의 품질시험 등 국내 R&D를 보조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제조업의 GDP비중이 높은 반면, 해외투자 규모나 해외매출비율이 낮고, 해외투자가 역수입보다는 무역흑자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관련 지표상으로는 현재 공동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산자부가 '03.10~11월에 걸쳐 실시한 해외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해외투자 이후에도 국내공장을 유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내기업과의 생산적인 분업관계를 구축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03.9월말까지 중국, 아세안지역에 해외투자한 기업중 국내공장을 폐쇄한 경우는 12.3% 수준이며, 특히, '03년도 對중국 투자 신고기업중에서는 4%에 불과하다.

해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해외투자 이후 국내생산이 증가한 기업이 36.9%로서 축소·중단기업(21.1%)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고용에서는 국내고용 확대가 18.8%인 반면, 축소 내지 중단이 28.7%로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서 보듯 현재까지는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외투자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지법인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증대라는 긍정적 면이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이전이나 제조업 해외투자가 작년에도 약 1,7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은 걱정스러운 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하겠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경우 부품·소재 등 생산기반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이 취약하여 사전대응이 미흡한 상태에서 제조업의 급속한 해외이전이 일어날 경우 성장률 둔화, 제조업-서비스업간 소득격차 및 동반부진, 실업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제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각 국의 대응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03.12월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의 석학이 참석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영국은 1970년대, 미국이 1980년대, 일본도 1990년대 이후 제조업공동화를 겪었으나, IT산업 발전 등으로 극복하여 왔다.

이들 국가에서 얻은 교훈은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나 제조업은 여전히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근간이며, 제조업이 있어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R&D투자와 인력개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제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공업화 과정이 공동화 현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임금, 입지, 인력규제 등의 경영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으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임금인상을 연계하는 합리적인 임금협상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등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공장입지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 폐지예정인 현역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05년에도 배정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병역 기술·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신문고를 개설하고 기업애로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기업의 해외이전 부문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지자체 퇴직공무원으로 공장설립지원단을 발족하여 인·허가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제(Cash Grant) 도입 등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고, Invest KOREA를 출범(03.12)시키는 등 범국가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주력기간산업, 미래신산업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3角軸化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창출하는 한편, 부품·소재 등 생산기반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인근국들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국내기업과 해외투자기업간 협력적 분업관계의 발전을 통해 해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현지법인과 국내 본사간 생산, 판매, 물류정보 등을 실시간 연계하는 글로벌 생산망관리체계(SCM)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이전 부문을 최소화하고 부품·소재 공급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상담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원부자재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 글로벌 생산망관리체계(SCM : Supply Chain Management)를 구축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개성공단개발을 통한 남북한 산업협력은 인건비 요인 등으로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해외이전 영향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 제조업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이전 동향파악을 강화하고, 제조업공동화 위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인근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로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으나,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당분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금융, IT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탈공업화를 진전시켜온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탈공업화를 경제구조의 성숙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면서도, 서비스만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감소를 완전히 보완하지 못하므로 제조업을 여전히 핵심 성장동력(the principal engine for growth)으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국, 선진국에서와 같이 지식기반서비스 경제로 순조롭게 진입해 나가되, 동시에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의 개발 및 발전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하겠다.

제 5 절 중소·벤처산업 활력고취

산업구조과 박현종 사무관

1. 중소기업의 창업 및 부도 동향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보면 경기침체로 창업이 크게 둔화되고 있고 부도법인수도 증가하였다. 전국의 8대도시(2000년 1월 이전에는 7대도시)를 대상으로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 동향을 살펴보면 창업이 감소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부도업체수가 약간씩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3.3%증가한 2,433개에 달하였다.

신설법인수 또한 2000년 41,460개로 정점을 이룬 이후 감소하다 2003년도에 급격히 감소(14.0%)하여 33,497개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8년 IMF와 같은 상황등을 감안한다면 2003년의 신설법인수나 부도법인수는 예년수준이라고 볼수 있다.

〈표 Ⅳ-1-14〉 8대도시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수 추이

(단위 : 개)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설법인수(A)	20,095	30,707	41,460	39,609	38,972	33,497
부도법인수(B)	7,728	2,469	2,800	2,349	1,973	2,433
A/B(배)	2.6	12.4	14.8	16.9	19.8	13.8

주 : 8대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임.

한편,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0.38%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져 2002년에는 0.06%를 기록하였다. 2003년 들어와서는 어음부도율이 0.08%를 나타내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2000년 이후 서울·지방간 어음부도율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방간 경제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Ⅳ-1-15〉 월별 어음 부도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 국	0.38	0.33	0.26	0.23	0.06	0.08
서 울	0.30	0.34	0.26	0.23	0.05	0.06
지 방	0.90	0.22	0.27	0.27	0.13	0.17

주 : 금액기준이며, 자료 : 한국은행

2.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벤처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가. 벤처기업의 등장과 발전과정

벤처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7.8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인 1998.5월부터 벤처기업확인업무가 개시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벤처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나타나고 있었으나, 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미흡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1996.7월 벤처투자회수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설립과 1997.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발전기반이 구축되었고, 1997년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벤처기업을 우리경제 회생의 견인차로서 육성하고자 본격적인 벤처기업육성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수는 1998년 2,042개에서 벤처기업수가 정점에 달한 2001년말에는 11,392개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벤처기업이 짧은 기간내에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게된 주요 요인

은 다음과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외환위기에 따른 대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였고,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둘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IT산업붐이 일어났고, 국내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반 및 통신산업 발전수준이 상당수준에 도달하여 있었다. 셋째, 코스닥시장 설치,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정부의 강력한 벤처기업육성정책이 추진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자금유용 등 일부 벤처관련 주체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로 인해 벤처산업 및 벤처정책 전반에 대한 반성과 관리가 강화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벤처붐의 퇴조에 따른 벤처산업의 위축은 벤처산업의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시기는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M&A 등을 통해 벤처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벤처산업의 조정기라 하겠다.

2002년 2월에는『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 벤처확인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이 마련되어, 정부의 벤처확인업무를 2005년(벤처투자기업확인은 2006년)에 조기 종료토록 하고, 민간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나.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의 확인기준 강화 및 벤처확인 업무의 조기 종료 계획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업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 1월말 현재 벤처기업 확인 업체수는 7,607개로 2002년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표 Ⅳ-1-16〉 월별 증감현황(업체수)

(단위 : 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누계
'98년도	-	-	-	-	304	427	413	140	230	145	160	223	2,042
'99년도	91	252	182	334	243	269	310	285	248	259	268	151	4,934
2000년도	278	334	458	543	563	7	618	519	384	311	382	-533	8,798
2001년도	350	370	460	420	364	-839	508	341	250	198	145	27	11,392
2002년도	-106	-52	-176	-319	-158	-399	-349	-122	-141	-144	-320	-328	8,778
2003년도	-11	-77	-157	-59	-42	-144	-165	-89	-77	30	-199	-86	7,702
2004년도	-95												7,607

'04. 1월말 기준 유형별로는 신기술기업이 5,484개로 전체의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벤처 투자기업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1-17〉 유형별 벤처기업 수('04.1월 기준)

(단위 : 개, %)

구 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계
업체수	646	1,477	5,484	7,607
%	8.5	19.4	72.1	100

업종별로는 제조업(68.1%)과 정보처리 S/W(23.5%)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 Ⅳ-1-18〉 업종별 벤처기업 수('04.1월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 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5,184	1,791	278	118	143	24	69	7,607
%	68.1	23.5	3.7	1.6	1.9	0.3	0.9	100

지역별로는 서울(39.3%)과 경기지역(25.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1-19〉 월별 증감현황('04.1월 기준)

(단위 : 개, %)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업체수	2,991	387	506	190	599	1,927	389	60	179	83	278	18	7,607
(%)	39.3	5.1	6.7	2.5	7.9	25.3	5.1	0.8	2.4	1.1	3.7	0.2	100.1

다. 벤처기업 정책의 변화

(1) 벤처기업 정책의 성과과 변화 배경

정부는 기술, 투자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 상황에서 벤처기업 확인제도,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와 붐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은 우리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중

심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도전정신과 성취욕을 고취시켜 경제 외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단기·압축성장에 따른 일부 벤처기업의 비리로 인해 『벤처기업의 건전화 방안』,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등이 추진되어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수출은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전략과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편승하여 두 자리 수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여 우리경제의 새로운 대안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수출상위 10대 중소기업 중 7개 기업(2003.6월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4개 기업(2003.6월 기준)이 포진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하고 있다.

⑵ 참여 정부의 벤처정책 방안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창출의 원동력인 벤처기업의 지속적 육성은 불가피하며 건전한 벤처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2003년 6월 『참여정부의 벤처정책방향』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에 보고되었다.

우선 시장기능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기반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2005년에 조기 종료(벤처투자기업은 2006년)하되 남은 기간동안은 시장 자율운영에 대비하여 벤처확인제도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에 주력토록 하고, 불법·부당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확인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 실태조사, 벤처 CEO 교육 등을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는 등 민간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둘째로 중소·벤처 창업여건 조성을 위해 창업대학원 개설, 전문창업강좌 개최 등을 통해 창업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토록 하였다.

셋째로 벤처투자역량의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를 설치 운영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유한회사형 투자제도(LLC)를 도입하는 한편, 유동화펀드 등을 통해 벤처투자자금의 유동성 증대를 도모하고 투자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등 투명한 투자여건을 확립하였다.

넷째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2003년 12개국 24개), SBIR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공동물류 A/S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지방벤처기업 및 여성벤처기업을 위해 지역 중심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여성기업 전용펀드 결성, 여성 E-lancer 양성 등 지방과 여성에 대한 벤처정책을 지속 발굴, 지원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특성상 『생성과 소멸』, 『창업과 퇴출』이 원활한 벤처생태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향후 추진방향

⑴ 벤처확인제도 강화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정부의 벤처기업확인 업무가 2005년도에 조기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정부 중심의 직접적 벤처육성정책은 종료되고,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자율의 간접적 지원 시책으로 전환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토록 벤처기업혁신능력평가 점수를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05년까지 60점)하여 벤처확인업무를 엄격히 관리하고, 벤처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벤처기업의 윤리경영을 확산 유도하여 벤처기업의 신뢰가 조기 회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중심의 벤처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정보제공, 벤처산업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및 업종별 벤처포럼 개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INKE) 운영 등 벤처기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대덕벤처밸리연합회, 여성벤처기업협회, 지역별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 단체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⑵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벤처산업의 성장은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에서부터 시작하므로 창의력 있는 우수인력의 벤처창업은 벤처기업육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의 벤처창업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생 창업 동아리지원, 창업교육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의 기초 인프라인 창업보육센터를 연구개발형에서 생산형으로 전환하여 창업보육센터를 내실화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팅·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창업관련 인·허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토대로 창업지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⑶ 벤처캐피탈의 활력 회복

벤처기업이 창업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젖줄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벤처캐피탈시장의 확충을 위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지속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03년 800억원)의 운영으로 투자자금 공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자된 자금의 회수를 원활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유동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조성된 『Pre-KOSDAQ 유동화 펀드』를 조성('03년 800억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매니저의 실적과 평판에 의해 펀드가 결성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펀드운용을 통하여 시장의 신뢰속에 성장해 가는 벤처캐피탈이 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선진국이 운용중인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투자평가 모델 개발, 투자실적관리 강화, 엔젤투자망 구축 등

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⑷ 벤처기업제품의 수요 창출 및 신시장 개척

현재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특성중의 하나가 우수한 기술력에 비하여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벤처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002년부터 중기청과 국방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방 물자를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구매 품목에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24개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를 지역별로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센터의 지원역량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고, 물류창고 및 A/S센터를 설치(미국 보스턴, LA)하여 벤처수출제품의 현지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SBIR 프로그램 참여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으로 '04년중 1억불 규모의 벤처기업해외진출 펀드(Global Star Fund)를 결성할 예정이다.

⑸ 지방 및 여성벤처기업 지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예산의 64%를 지방에 배분하는 등 지원여력을 지방기업에 우선 할애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의 지방화 비율은 28%에 불과하는 등 지방의 벤처환경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지역별로 벤처센터 건립, 공동장비 구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을 지역별 전략 업종 중심으로 벤처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역혁신 주체간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토록 지원하여 벤처기업의 지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업경영능력이 부족한 여성 벤처기업인을 위해 여성벤처 CEO 교육, E-lancer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의 벤처투자펀드('03년 200억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⑹ 벤처기업 M&A 활성화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추진으로 지난 5년간 벤처기업의 양적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코스닥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익모델을 갖추지 못한 부실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실패한 기업 또는 경영인이 그동안 축적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보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또는 M&A 등을 통해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대상 확대, 합병절차 간소화, 기업가치 공인평가제도 도입, 주식교환·합병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03. 12월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04년 상반기중에는 벤처기업특별법 관련 하위 법령의 정비 및 벤처기업 구조조정심의회 구성·운영, 주식가치 전문 공인평가기관 지정 등 M&A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M&A펀드 확충, M&A 중개기관 육성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M&A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 6 절 환경과 시장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

산업환경과 사무관 이기형

1. 환경보전과 조화되는 산업환경정책의 필요성

그 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하여 왔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오염물질 배출산업으로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존 주력사업의 경우 환경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

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곤란하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강화에 따라 산업계의 준비가 시급하며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가의 경우 점차 환경을 이유로 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개발과 보전, 환경과 경제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Trade-Off 관계)에서 탈피하여 개발과 보전을 동시 달성(Win-Win 관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고 및 행태의 전환이 요구되고 천연자원 및 환경부하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생태경제적 효율성(eco-efficiency)의 추구도 또한 요구된다.

UNEP 등 각종 국제기구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단으로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제거할 수 있는 청정 생산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였다. 청정생산을 통하여 기업은 생산구조전환을 도모하고 국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외 산업환경 여건

가. 국제 환경관련 동향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21세기 지구 환경실천강령(Agenda 21)' 채택을 계기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UNEP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국제회의가 급증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에 걸쳐 221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몬트리올의정서(1992.5.), 기후변화협약(1993.12.), 바젤협약(1994.2.) 등 45개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특정 물질 및 에너지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무역을 제한하는 국제환경협약이 증가됨에 따라 이제 환경문제는 산업, 무역 등 모든 경제부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단순히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

한 환경문제의 차원을 넘어 각국의 향후 경제성장과 무역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협약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환경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WTO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중심으로 WTO 규범과 다자환경협약상 무역의무간의 관계,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폐지 등이 주요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1970년 환경정책위원회(EPOC)를 설립하여 지구환경논의를 주도해 온 OECD는 지구구조정책, 국가환경정책, 환경성과 등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표준화 기구(ISO)도 기술위원회(TC 207)를 설치하여 환경경영의 표준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DP), 유엔공업기구(UNIDO),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등 유엔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환경평가관리, 청정생산, 지속가능발전 등과 관련한 국제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리우선언 이후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요하네스버그선언문과 빈곤퇴치,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소비 패턴 개선, 자연자원 보전 및 관리 등 이행계획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향후 10-20년간 진행될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규제 강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U의 경우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등을 통해 생산자에게 제품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제품 자체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역외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 대EU 수출액의 62%(2002년 기준)가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국내 환경규제 동향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과 함께 국내적으로도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어, 현재 33개가 넘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기준, 환경부담금·부과금, 환경영향평가, 연료사용규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환경관련 법규의 복수 입법화 과정에서 양산된 사전적 환경규제는 중복성, 운영상의 경직성, 낮은 실효성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산업으로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인한 비용상승의 요인에 의해서도 세계시장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우려가 높다. 향후 환경규제의 강화로 환경비용 지출규모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특정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금지, 생산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한 신고·허가제 운영, 특정연료 사용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재활용의무 등 각종 직·간접적인 규제들로 인하여 산업활동의 전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 및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는 최근 수년에 걸쳐 대폭 강화되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있어서 대기의 경우 1995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쳐 강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배출시설별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수질의 경우 1996년부터 대폭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 부터는 사업장의 총질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산업계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폐기물예치금·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부과금은 현재 24종에 이르고 있으며, 1999년에 2,975억원, 2000년에 3,418억원, 2001년에 4,08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2004년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및 악취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인해 대기질 개

선이 획기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기업활동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우리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여건에 따라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환경규제의 적용시기 연기 또는 환경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2003년에 수립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에 따른 기술개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환경규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정비

날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우리 기업이 이제까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환경배려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산업자원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키 위한 제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되어 있는 환경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을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95년 12월에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1996년 7월과 8월에는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한 바 있고, 이에 근거하여 1997년 4월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을 수립하여 제반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국제규격 (ISO14001)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규제성 조항을 폐지하여 민간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최근 국제 환경규제가 제품의 공정 및 재자원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등 산업환경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기업 등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00호, 2002.1.14),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01호 2002.8.8), 및 동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177호, 2002.8.21)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인증업무는 민간기관으로 이양하고, 인증기관을 인정해주는 인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

제를 신설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효율적 추진과 공신력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그 외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및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산업계에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계 정보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경영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 및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유지하여 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구매가 촉진되도록 하였다. 또한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를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료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국제 환경산업동향에 면밀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계의 환경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4.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보급

산업자원부는 날로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청정생산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이란 설계, 생산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보다 오염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이 더욱 효율적이므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생산방식임에도 이에는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하고, 투자 위험성도 커 대기업도 선뜻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는 '95년부터 청정생산기술을 개발·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보다 오염이 적게 발생하고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청정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한편, '98년 2월 산업환경 실천과제로 고시된 특정 청정생산시설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에서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향후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핵심과제를 중점 발굴·지원할 예정이며, 생태산업단지(EIP ; Eco-Industrial Park)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개별기업의 청정생산을 산업단지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Ⅳ-1-20〉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실적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예산(억원)	20	40	120	174	300	300	345	350	390
지원과제수	14	32	96	160	237	226	206	194	167

특히, 중소기업은 독자적 기술개발능력은 물론 자체 생산공정의 환경적 문제점을 분석·진단할 능력조차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공정진단팀을 구성하여 원료도입부터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공정진단·지도사업을 '99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으며, '03년부터는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공급망을 활용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사업 및 전문가 Group을 통한 중소기업 통합환경경영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청정생산기술·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01년 5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을 청정 생산의 세계적인 확산을 목적으로 UNEP, UNIDO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청정 생산지원센터(NCPC,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공동사업('01년~'04)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95년부터 관련법 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지원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환경친화적산업발전촉진협의회"라는 Task force팀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주요 업종별

산업환경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업종별 중장기 비전과 향후 5년간 개발이 시급한 핵심 청정생산기술 과제 등 주요 실천 방안을 제시한 「청정생산 확산 중기 실천계획」(2000년)을 마련하였다. 동 보고서는 향후 지속적인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의 확산을 통해 생산성을 2배로 증대시키고, 환경오염물 배출을 1/2로 저감하여 국내 청정생산 효율성(Eco-Efficiency)를 '99년 대비 2010년까지 4배 끌어올리겠다는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였다. '01년에는 동 계획을 발전시켜 청정생산과 에너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전략도 수립하였다.

'02년부터는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업종별 청정생산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여 업종별 핵심과제도출 등 로드맵 작성 과 국내외 기술 및 환경규제 동향 분석 등 정보교류하고 있으며 '03년에는 자동차, 정밀화학 등 주요 공해유발업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국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환경의식 제고로 환경산업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여 환경친화적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산 환경설비의 기술수준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환경설비 수요자는 주로 외국 설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산 환경설비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10~70% 수준으로 선진국과 4~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유망산업의 하나인 환경설비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내 환경설비에 관한 기술은 핵심기술력의 취약,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그 성능과 품질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 등 여건부족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수요

뿐만아니라 해외수출의 길이 매우 좁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책의 하나로 2000년에 시행된 환경설비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하여는 우선구매, 자금지원 등의 혜택으로 이어져 환경설비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설비 품질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 「우수환경설비 시범품질인증」 사업을 통해 2000년 9월 탈황설비 등 5개품목 7개업체에 대하여 시범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본격적인 인증사업 실시를 위해 2000.10월에는 '환경설비품질인증운영요령'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소각설비 등 14개 품목, 12개 업체에 대한 환경설비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였고, 2002년도에는 집진설비 등 10개 품목 10개 업체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탈질설비 등 16개 품목 16개 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환경설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위주의 기술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큰 CO2제거기술 등 미래핵심기술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 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2002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산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설비의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하폐수, 폐가스, 폐기물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하여 환경산업 B2B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환경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기업체가 참여하는 "환경산업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효율적인 환경산업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95년부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환경설비, 청정생산설비, 자원재활용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과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해 오고 있다. 2002년에는 275억원, 2003년에

는 22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3,93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환경설비산업 시장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표 Ⅳ-1-21〉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융자지원 현황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예산(억원)	330	225	498	521	749	760	352	275	225	250

한편, 1998년 11월부터 국내외 환경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환경설비 산업정보망」구축사업을 시행하여 2003년 12월말 현재 국내 환경설비업체 현황정보 813건, 품목정보 3,378건, 국내외 정책·시장·입찰정보 등 동향정보 393여건, 신기술정보 1,772건 등 환경설비 산업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6. 재활용산업 육성

'60년대 이후 정부주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우리 산업은 '90년대에 이르러 큰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자원·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다량투입·다량 생산에 의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라는 우리 산업의 발전전략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근로 임금의 상승 등에 따라 한계에 다다랐고, 특히 '90년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강화되어 온 각종 환경규제가 자원다소비형·오염다발형인 우리 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제품 및 기업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부는 '97년 6월 산업계의 자원재활용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국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GR마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 현재 GR대상 품목을 250개, GR규격 209종으로 확대하여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GR인증 획득건수를 205건으로 확대하여 우수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하였다.

2004년에는 GR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인증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신보, 중기특례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재활용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인증제품 등 재활용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에서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자생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 판로 지원 및 각종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재활용산업 육상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표 Ⅳ-1-22〉 GR인증 및 지원 현황 (누계)

구 분	인증대상품목	인증규격제정
1999	103	83
2000	166	113
2001	192	155
2002	225	174
2003	250	209

생산공정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청정생산기술개발자금 등을 재활용기술개발 사업에 집중지원하되, 사업자단체가 중심이되어 업종별 공통애로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개발토록하여 기술개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기술표준원 내에 있는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타』로 하여금 품목별·업종별 또는 연구기관별로 각기 추진되어 온 재활용기술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곳의 개방실험실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타에서는 현재까지 117개 업체에 대한 Pilot설비 이용 기술개발지원, 64회에 걸친 재활용 애로기술기원, 410명에 대한 현장기술 실무기술교육, 6회 1,040명에 대한 재활용기술세미나 등을 통해 재활용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2003년 12월 현재 특허 4,990건, 재활용기술 2,313건, 세미나 및 논문 4,591건 등 총 11,894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활용업계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교환정보시스템 기능의 활성화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는 2000년 3월부터 대한상의에 “대한상의산업환경네트워크”을 구축 2003년 12월 현재 총 1,220개 재활용업체 및 234건의 산업부산물 정보가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동시스템을 자원재활용기술

개발센타의 “재활용데이타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재활용정보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업계에 보급,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 7 절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상거래과 사무관 김대일

1. 머리말

지금 세계 경제는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시대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생산·경영·판매 등 기업활동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이러한 디지털경제의 주역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원가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는 글로벌마켓의 형성과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던져 주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주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국경을 초월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조차 생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를 최우선의 국가과제로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00.2)」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1.4, ‘02.6)」

을 수립하여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발전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2004년도 전자상거래 추진실적 및 평가

전체적으로 2003년은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에 따라 e-비즈니스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업내 협업 문화를 크게 확산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메가트렌드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금년에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범위 확대, 공인전자문서보관서 지정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안과 서면행위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개별법 54개를 정비하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 상반기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지식 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의 대중화를 통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04.1월 공포 예정)한 바 있다.

나.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① 기술개발, 인력양성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전자무역용 전자문서 내용 증명 시스템, 시멘틱웹 기반의 통합정보관리 플랫폼 개발 등 4개 전략과제 및 수출물류 프로세스 지원을 위한 웹기반 선적관리 시스템, Web-to-Host 전환을 통한 기업정보 포탈 지원 솔루션 개발 등 일반과제 11개를 선정

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인력양성을 위하여 e-비즈니스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사이버아카데미체제를 구축하였다.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는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02년까지 e-비즈기획, 전자무역, ERP, CRM, SCM, 물류/유통의 6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총 10회에 걸쳐 11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03년에는 모바일비즈니스, 전자문서표준화의 2개 신규과정 개발과 e-비즈기획, ERP, SCM, CRM의 4개 개정을 개정/보완과 함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강사 및 실무자 대상의 특별과정을 개발하여 16회에 걸쳐 2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e-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여성사이버아카데미 구축 분야에서는 '03년중 e-러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별 수요조사와 e-비즈니스 전략기획전문가 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e-비즈니스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와 별도로 전자거래 촉진의 일환으로 e-비즈니스 관련대학 및 산학협동 e-비즈니스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였다. 대학지원의 경우 경성대 외 5개 대학을 대상으로 75백만원씩 지원하였고, 대학원의 경우는 국민대학교 등 4개 대학원에 대하여 각각 190백만원씩 지원을 하였는 바, 기업의 실무를 이해하고 있는 기 취업인력의 수강을 촉진하여 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②전자결제 확산에 기여

게이트웨이 방식의 B2B보증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을 '02년 736억원에서 '03년 36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전자결제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③이러닝 산업 기반 구축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이러닝 산업의 확산을 위해 '전자학습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콘텐츠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④인덱스 및 사례구축

15개 업종의 e-비즈니스 인덱스를 조사하여 850여개 개별기업에게 보

급하였으며, e-비즈니스 자가진단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5개 업종에 대한 한일 e-비즈니스 공동조사 및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개발 보급하였다.

라. e-비즈니스 글로벌화

우리나라에서 ASEM e-Logistics, e-Learning, e-Health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세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제3차 ASEM TFAP(무역원활화행동계획) 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각국의 정책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정책수립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OECD에는 WPIE(정보경제작업반), APEC에는 ECSG(전자상거래운영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PAA, 한일, ASEM 등의 전자무역 시범사업은 국내외 참여기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ASEM 전자상거래 포탈사이트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영국, 일본 등과는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핀란드와는 ICT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e-비즈니스솔루션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솔루션 수출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3. 2003년도 전자상거래 정책추진 방향

가. 기본방향

2003년에는 국내경기 침체속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약 238조원으로 '02년 177조원에서 약 34%로 증가하였으며 e-비즈니스 투자도 '02년 2조4,789억원에서 '03년 2조7,052억원으로 9.1% 소폭 증가하였다.

(단위: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추정)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증가율)	57.6조	119조(107%)	177.8조(49%)	238.3조(34%)
총거래액	1,270조원	1,308조원	1,386조원	1,426조원
전자상거래율	4.5%	9.1%	12.8%	16.7%

* 전자상거래율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 총거래액
* 2003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3년 상반기 110조1,100억원(통계청 자료), 동 조사 결과에 따른 하반기 성장률 16.5%로 추정

이처럼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는 꾸준히 진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e-비즈니스의 확산과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제약하는 법제가 상존하고 있고 기업간 협업문화, 거래관행, 인력·기술·표준·글로벌화 등 e-비즈니스 확산 기반과 추진역량이 취약하다. 특히, IT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었으나 이의 활용을 통한 실제 e-비즈니스 구현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극복하고 e-비즈니스 확산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IT화 확산,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네트웍 구축, 전자무역의 활성화, 이러닝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등 경제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구성하고 R&D, 생산, 판매, 물류 등 기업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e-비즈니스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나. 주요 추진시책

⑴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

전자상거래 관련 3대 법안을 제·개정 작업을 금년중으로 마무리하여 전자상거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종이문서의 제출, 보존 등을 규정한 개별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과 전자상거래와 전자서명의 활성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전자문서 유통·보존의 안전을 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할 것이다. 이러닝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도 금년중으로 완료하여 이러닝 산업기반 조성, 이러닝을 통한 산업인력의 경쟁력 제고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창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⑵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① 기술개발, 인력양성

e-비즈니스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전략분야(e-비즈니스 요소 기술 등) 위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집중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e-비즈니스 대학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카네기멜론대 석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e-비즈니스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대한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합동으로 e-비즈니스 성공사례를 전국 순회 e-비즈니스 로드쇼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e-비즈 엑스포, e-비즈니스 대상, 국제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e-비즈니스 마인드 확산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② 전자결제 확산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용보증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03년 3659억원에서 '04년 7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제도정비 등을 통해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③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2004년에는 이러닝산업발전법령의 제정을 마무리하고 국가적 확산체계, 산업기반 구축, 이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e러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e러닝의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e러닝의 특성을 고려, 'e러닝 정책포럼'의 운영을 강화하여 운영해 e러닝의 지속적 확산과 정책개발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e러닝 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식과 산업의 접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제규격, 선도적 표준을 연구할 'e러닝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고 차세대 e러닝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⑶ 기업지원시스템 구현 추진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정부부문의 혁신을 달성하고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31개 전자정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구축은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행정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일목요연한 온라인 행정정보 안내 및 민원처리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기업관련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는 기 구축된 다양한 기업정보 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들이 물류, 무역, 결제 등 산업기간망과 연계와 컨설팅, e-러닝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03년부터 BPR/ISP 수립을 거쳐 '04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08년까지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⑷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2005년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e-비즈니스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APEC 차원의 신규협력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ASEM, OECD 등 기타 국제기구의 논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ASEM e-Health 세미나, 전자무역 시범사업, ASEM 전자상거래 포탈사이트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자협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일본과의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영국에서 개최되는 한영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 참가한다. 또한 중국과는 전자상거래 포탈사이트 구축,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비즈니스솔루션 수출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세미나, 전시회, 상담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4. 산업부문 전자상거래기반 구축사업

가. B2B 네트웍 구축을 통한 B2B 인프라 확충

우리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정부는 산업부문 B2B네트웍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제품/부품 분류체계의 표준화, 부품·업체 DB, 표준 전자문서 및 전자카탈로그, 업종내 Supply Chain간 협업(Collaboration)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협업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동 사업은 기업간 협업 없이는 구축하기 곤란하며, 그 산출물이 다수의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간 거래·협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며, 2003년말 현재 39여개 업종에서 1000여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여 업종별로 1~3차년도 사업을 추진중이다.

1차('00)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섬유, 전력, 유통, 생물 등 9개
	* 대부분 '00년부터 협회중심으로 추진(생물은 '01년부터 추진)
	* '03. 9월 사업 완료(자동차, 조선 등 4개 사업 추가지원)
2차('01)	시계, 파스너, 공구, 농축산물, 건설, 정밀화학, 금형, 석유제품, 골판지, 가구·목재, 물류 등 11개
	* 온라인-오프라인간 컨소시엄 구성, 공모방식으로 선정('01.4)
	* '03.6월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03년말 현재 3차년도 사업 추진중
3차('02)	자동화장비, 뉴세라믹, 비철금속, 안경/광학, 완구, 건설설비, 애니메이션, 제지, 환경, 신용보증(공통지원 영역) 등 10개
	* 컨소시엄 방식을 유지하되 오프라인이 중심으로 선정('02.3)
	* '03년말 현재 2차년도 사업추진중
4차('03)	전지, 광업, 주조, 귀금속, 문구, 의료용구, 항업, 식품, 화훼 등 9개
	* 컨소시엄 방식을 유지하되 오프라인이 중심으로 선정('03.3)
	* '03.7월부터 1차년도 사업추진중

’00년부터 추진된 1차 업종(9개)은 ‘02.10월 3개년 사업이 최종 완료되었으며 자동차 업종의 KNX망(현대·기아자동차 및 부품협력사 등 970여 업체가 가입, 활용중), 유통업종의 KorEANet(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 5개사 및 1000여개 협력업체 가입 및 활용), 조선업종의 설계정보 교환 시스템(한진중공업 및 협력업체 활용) 등 구축이 완료된 결과물의 경우 실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2차업종(11개), 3차업종(10개)에 대하여는 활용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2차 업종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04년에는 전자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4차 업종은 ’03.11월 업종별 추진전략(ISP) 수립을 완료하고 표준분류체계 수립 등 후행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개형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가 아직도 부진한 상태(’03년 B2B 거래액 238조원 중 e-MP를 통해 거래된 금액은 약 7조원(3%))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B2B 활성화를 저해하는 많은 요인(투명거래에 대한 부담감, B2B 전자상거래의 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03년도부터는 지속적인 업종 확대 외에도 기존업종의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지원확대, 활용중심으로의 사업방향 전환, 공급망관리(SCM) 도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04년에는 B2B 인프라가 우리 산업의 생산성 및 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업종간 거래 및 데이터 호환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통합상품분류체계 구축 및 검색틀 개발, 결재, 물류 등 거래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G2B 및 해외 e-마켓플레이스와의 연계 등 실거래 활성화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동북아 e-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한 물류기능 확충 및 e-Trade hub 구축(한·중 e-Trade hub로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문 기업간(B2B) 네트웍 구축사업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기업간 협업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중소기업 IT화 추진

중소기업의 IT화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강화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등 IT화를 통해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물리적인 제품의 유통과 생산 능력 못지 않게 경쟁력 우위 확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중요시한 것이다.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EO의 마인드, 전문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자체적인 IT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IT화가 장차 기업의 e-비즈니스의 조기 정착과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초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취지에서 정부는 '01년 2월부터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3년도 부터는 3만개 사업과 별개로 IT화 시스템 업그레이드·협업적 IT화 중심의 IT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기업의 정보화 수준과 추진 의지 등을 감안하여 IT화에 대한 사전 컨설팅, 기초정보 S/W 구축지원, ERP 및 생산공정 IT화 S/W 도입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등 및 협업적 IT화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03년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정부의 예산(총 773억원, '01.2~'03.12)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지원 분야	IT화 사전컨설팅	기초정보 S/W	ERP 도입	생산공정 IT화	협업적 IT화	합 계 (갯수)
지원 신청	270	40,552	3,196	40	461	44,519
지원 완료	240	27,750	2,592	39	311	30,932
소요 예산	3.3	269.7	423.6	6.3	35.7	738.6*

* 34.4억원은 사업관리비

당초 3만개라는 양적 목표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만 932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IT화를 지원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및 IT업체의 적극적 참여의 결과이며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IT 패러다임에의 대응 및 정보화를 통한 기업 경영의 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동 사업에 대해 한국전산원의 평가('03.12) 결과 IT화 구축 이후 사용률은 평균 80%를 상회하여 지원 성과가 있으나, 실제 경영에서의 업무성과·조직성과는 3.3점 수준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전산원에서 작성한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는 기초정보 S/W 지원기업, ERP구축 기업, 협업적 IT화 참여 기업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 S/W 도입후의 성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만족하며 시스템의 성과도 높으며 업무 성과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무작위 추출 200개 기업에 대한 "현재 사용 여부 조사 결과" 160개 업체가 도입한 기초 S/W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ERP 도입 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42점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정보시스템의 기능, 안정성, 정확성, 최신성, 사용편이성, 유용성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3.50)되었다. 업무성과 역시 조사기업의 60.6%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결과(3.44)가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성과 측면에서는 비용절감과 수익증가는

크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3.33), ERP시스템 도입 이후, 기업의 정보화인프라가 향상(55.1%), 관리수준 향상(60%)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협업적 IT화의 경우는 기초수준(협업적 IT 시스템 품질 수준)은 매우 높고, 활용수준(정보공유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며, 활용성과(프로세스 개선 효과)는 아직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⑵ 2003년 중소기업 IT화 사업 추진 실적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추진 경험을 반영하여 시작된 2003년 중소기업 IT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IT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협업적 IT화에 중점을 두었다.

'03년 3월부터 시작하여 '04년 1월말까지 진행된 2003년 IT화 사업의 추진(총 예산 330억원) 결과, 총 2,001개사가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중 1,310개사에 대하여 IT화를 지원하였다.

(단위 : 개수, 억원)

지원 분야	업그레이드			협업적 IT화			합계
	ERP	IT화 선도	통합무역/ 모바일 IT	대·중소 협업	SCM	e-MP 연계/ e-러닝	
지원 신청	1,118	51	399/9	324	47	48/5	2,001
지원완료	652	32	363/5	205	29	20/4	1,310
소요예산	165.8	15.7	14.5/1.2	23.1	7.8	2.1/1.2	231.5*

* 잔여 예산은 '04. 3월말까지 집행

또한, 3만개 IT화 사업 참여 기업 중 실태 조사를 통해 “구축 이후 활용도가 저조한 기업”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된 IT화 콜센터(1588-1747)를 통하여 IT활용도 제고 및 A/S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동 콜센터를 통해 작년 한해 331건의 현장컨설팅, 245회 집체 교육 실시, 236회의 산학 연계 IT화를 지원하였다.

⑶ 2004년 중소기업 IT화 사업

2004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비록 예산은 축소(200억원)되었으나, 오히려 사업 내용은 다양화하였다. 즉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과 2003년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포함하여, 지난 3년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프라 및 중소기업 CEO 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너무 수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등의 문제점 노출하였다.

따라서 2004년에는 ERP,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등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IT화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의 내실화와 병행하여, 설계 부문(e-Manufacturing) 협업화, 선도 업종/지역 중심의 협업화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IT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T화 추진 성공 사례 발표회”, “IT화 Fair"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를 세계적 수준의 전자상거래 선도국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는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IT화 사업은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ERP・SCM 템플릿 개발 사업

정부는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01년부터 3년간 「업종

별 ERP 템플릿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범용적인 ERP 개발·보급을 지양하고, 해당업종의 세부분야별 특성, 표준프로세스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도출, 이를 템플릿 형식으로 ERP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RP 구축과정에서 50~60%을 차지하는 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의 대폭 절감과 함께, ERP를 통한 경영혁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효과를 제고하자는 사업이다.

이 결과 제 1차 ERP 템플릿 개발 사업에는 12개 업종의 13개 컨소시엄에 대해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차 템플릿 개발사업에는 19개 사업자에 5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3년도에는 ERP 템플릿의 확산·보급을 위해 「ERP 템플릿 전용사이트(it.korcham.net)」를 만들어 ERP 구축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에는 개발된 ERP템플릿의 보급과 활용에 좀더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 간 ERP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을 SCM 템플릿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키로 하고, 2003년말에 8개분야에 대한 개발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2004년도에 본격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라.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 지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정보화기반 구축을 통한 최적의 정보환경 조성으로 기존 아날로그적 전통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확산하고 기업체 정보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첫번째로 산업단지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기업정보,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기반, 온라인 민원행정을 제공하고 두번째로 기업체 정보화기반 구축지원을 통하여 오프라인상에서 초고속통신망·H/W·S/W등 IT화 기반 제공, 정보화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디지털산업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 5월에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경기권(반월·시화산업단지) 포털사이트가 개통되었고, 2002년 7월에는 서울권·부산권·인천권·광주·경북권 등 5개권역을 대상으로 한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식을 거행하였으며, 2003년 7월에는 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 등 5개권역을 대상으로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잔여 5개지역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16개 전 광역시도를 구축완료하여 전국 산업단지(입주기업체)를 벨트화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구 분	1차년도 (완료)	2차년도 (완료)	3차년도 (완료)	4차년도 (진행)
사업기간	'00.5~'01.4	'01.5~'02.7	'02.8~'03.7	'03.8~'04.7
대상지역	경기(반월/시화) <1개 지역>	서울,부산,인천 광주,경북 <5개 지역>	대전,울산, 전북전남,경남 <5개 지역>	대구,강원, 충북충남,제주 <5개 지역>
사업비 (백만원)	1,430	4,460	4,662	3,289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을 구축함으로써 원부자재 등의 구매비용 절감, 생산제품 판매망 확충, 수출활로 개척, 기업·제품 홍보 극대화 및 초고속통신망, H/W, S/W 구축지원 등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입주기업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마. XML 기반 e-비즈니스 표준화 확산

정보화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표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자문서의 방식이 기존의 EDI의 폐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해오고 있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통합포럼(ECIF)를 통하여 표준화작업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한편, 전자문서 표준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문서표준화 가이드라인 2.0을 개발 및 보급하고 아울러 63종의 핵심컴포넌트를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KEC) 표준으로 제정하게 되어 차세대 전자문서 개발보급의 혁신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핵심컴포넌트 기반 차세대 전자문서를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전자문서 개발경비 절감 및 상호운용성 제고 등 많은 장점을 안고 있어 향후 e비즈니스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즈니스 협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업종부문의 표준협업프로세스도 심사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 B2B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각 업종별 컨소시엄들이 추진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및 전자무역 등 전자거래에 필요한 표준 전자문서 개발과 철강, 환경, 금형, 생물, 무역 등의 업무에 대한 전자문서 개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ebXML(Eletronic Business XML)이라는 XML기반의 글로벌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는 범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기업간 협력과 국가간 협력의 가장 큰 장애였던 정보시스템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동안 전자거래진흥원 내에 구축한 중앙등록저장소(REMKO)를 통한 철강업종 및 유통업종에 ebXML을 실적용하여 e비즈니스 성과를 성공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표준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아시아상호연동성 테스트, ebXML아시아 위원회에 참여하여 아시아간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2003년 9월 UN/CEFACT포럼을 국내에서 개최되어 한국의 e비즈니스표준의 발전현황을 국제에 알리는 계기 마련이 되었다. 아울러 UN총회, AFACT 등의 국제 표준제정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등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및 아시아권역에서 e-비즈니스 강국으로서 국제 전자거래 표준화 구심점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인식 제고

산업자원부는 1997년부터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전자상거래지

원센터(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지정하여 산업체 근무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산업체에 컨설팅, 정보제공 및 거래알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에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4개 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으며, 2003년말 현재 35개 ECRC가 전국의 중견도시에 산재하여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추진거점으로서 지역간·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 전자상거래인식 제고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구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7개년 사업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15만여명의 전자상거래 실무인력을 양성하였고, 2,105종의 교육과목 개설 및 운영, 2,333명 전문강사 확보, 3,639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 실시, 1,749명의 전문컨설턴트를 확보하였다. 그 외에 인터넷쇼핑몰·D/B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 52,777건의 거래알선 제공 및 82건의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학술연구, 기술정보의 수집 및 정보제공, 관련 정보 DB 구축, 거래알선 시스템 구축,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전자상거래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는 지역중심으로 ECE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제주권, 인천·경기·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내 최우수 ECRC를 “선도ECRC"로 지정하였으며, 선도ECRC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ECRC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제 8 절 생산적·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정착

산업혁신과 서기관 박인규

1. 국가발전 전략과 노사문화

세계화·지식기반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시장으로 변모하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단일시장에서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발전원리도 달라지고 한 나라의 국부와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이 보유하는 물적 자원의 양과 질이 아니라 지식·정보·기술 등 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지적 자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지식기반 정보화시대의 국가와 기업발전의 핵심전략은 지식·정보·기술의 생산 주체인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이 보람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노사문화는 변해야 한다.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지시와 통제위주의 경영관행 등 종전의 대립과 갈등관계에서 탈피하여 노사의 의식과 행태,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시대변화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관계의 불안이 계속될 경우 경제 회생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노사신뢰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고, 법제도 관련 현안 쟁점에 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나 지역에서 최고가 아닌 세계적으로 최고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된 오늘날 품질이나 가격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여세를 몰아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사 당사자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노사정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

2. 2003년도 노사관계의 전개 및 평가

가. 2003년도 노사관계 개관

‘03년도 노사관계의 기류변화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방향은 “대화와 타협”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의 강조는 노동계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더라도 용인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노동정책 결정라인에 노동계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되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공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노동계 내부에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정부 초기의 정책방향은 연초 두산중공업 파업, 철도노조와의 4.20 노정합의, 조흥은행 파업 발생 등의 상반기를 지나면서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접목되어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법과 원칙의 병행 필요성, 대기업·강성노조운동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 상정을 계기로 시작된 6월2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와 구속, 화물연대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노정간의 관계가 오히려 크게 경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갈등

향후 노사관계의 큰 획을 그을만한 굵직한 법·제도 개선사항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한 노사정간 갈등도 심화되었다

첫째, 2003년 상반기 중에는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합의사항 중 하나로 5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근로시간단축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의 폐지, 연차휴가의 조정(15일2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3월 확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할증률 25% 적용, 생리휴가의 무급화, 사업장 규모별로 7년간 단계적 실시, 포괄적 임금보전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노사의 합의없이 정부안 중심으로 법제화가 된 만큼 향후 임금보전, 휴가일수 조정 및 단계적 실시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

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정규직 보호의 법제화가 무산된 점을 들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는 5월 23일 그동안 논의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된 공익위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의 경우 일정기간(2년) 동안의 사용은 허가하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불허하고, 파견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등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허용업종에 대하여는 노사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불법파업과 관련 손해배상 및 가압류제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들 수 있다.

1월의 두산중공업 근로자 분신 및 10월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 자살 등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에서 계속된 노동계의 자살 및 분신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도 개선과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계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가 협소한 현 상황에서 사용자가 손배 및 가압류를 노조탄압과 활동제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 노조법 제정을 유보한 점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일부(협약체결권)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동2권에 대한 허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나 노동3권의 완전보장을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반대로 국무회의에서 유보,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평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되었

으나 중소기업의 반발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양 제도가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여섯째, 퇴직연금제 법안의 통과를 유보한 점이다.

경영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퇴직금제의 전 사업장 확대를 우선시 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일곱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의견 대립이다. 2003년 5월10일 출범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제도 개선안을 11월초에 완성하였다. 근로자의 단결권의 확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단체협약 및 교섭제도의 개선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및 조정(알선)제도의 신설 등 조정기능의 활성화,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구제제도의 효율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 및 노사관계 규율체계의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한 노사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여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 산별교섭의 진전과 비정규직 조직화

노사관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산별교섭이 크게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일부 소산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교섭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3년 나타난 양상은 확연히 달랐다. 연초부터 참여정부의 중층적 교섭구조에 대한 강조, 산별메뉴얼 발간,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 제기 등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실제로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간, 금속노조와 관련사간 중앙교섭이 성사되는 등 실질적인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기존에 제기해 왔던 이중·삼중교섭의 폐해, 집단행동의 증가 등 산별교섭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정되면서, 해당기업들이 산별교섭에 대해서 갖는 반감은 증폭되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체 노조가 중심이 된 금속노조가 시기집중 파업 등을 통해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 40시간제 실시”, “임시직 사용제한” 등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면서, 중앙교섭을 역제의하였던 사용자들 사이에서조차 사용자 대표에 대한 위임철회 등 논란

이 야기되고, 산별교섭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확산이 해당기업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2003년도 노사분규의 약 50%가 산별노조에서 발생하는 등 국가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산별을 크게 강화하려는 노동계와 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28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제조업내 하청기업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라. 사망・분신정국의 형성

2003년도의 노사관계의 불안정도는 이른 바 “사망·분신정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연초 두산중공업에 이어 하반기 들어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의 노조간부들이 잇따라 자살·분신하였고 노동계는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에나 있었던 분신이 10여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재연되고 1990년대말 사라졌던 화염병, 쇠파이프가 다시 집회 현장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극단적 행위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형성된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과 불법파업·불법행위의 만연, 분쟁조정시스템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마.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증가

2003년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노사정간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노사간의 입장대립,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산별교섭과 관련한 갈등, 양대노총간의 경쟁가열 등으로 발생한 2003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20건으로 전년도 322건과 비슷하다.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0년도의 322건에 근접한 수치로 300건을 상회한 수치가 전년에 이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분규 참가자수는 137,241명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데 반해 근로손실일수는 1,298,663명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가 조기 타결되고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상파업 등으로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산별주도의 파업이 빈번하였으며, 극단적인 행위가 많아 파업 참가자수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전면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부분의 노사분규 건수가 167건으로 전년의 136건보다 늘어남으로써 그 파급효과는 더 크게 체감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02년 17,177억원보다 45.3%가 증가한 24,972억원 발생하고, 수출차질액도 '02년 608백만달러보다 73.2%가 증가한 1,053백만달러를 시현하였다.

분규발생 원인별 생산차질액을 보면 임·단협이 23,859억원(95.5%), 구조조정 389억원(1.6%), 노동법제도 개선 63억원(0.0%), 기타 721억원(0.5%)으로 임·단협, 구조조정 관련 노사분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Ⅳ-1-23> 노사분규 주요 지표 추이

연 도	발생건수	분규참가자수 (천명)	근로손실일수 (천일)	생산차질액 (억원)	수출차질액 (백만달러)
1987	3,749	1,262	6,947	27,782	537
1988	1,873	293	5,401	32,020	732
1989	1,616	409	6,351	41,995	1,363
1990	322	134	4,487	14,387	314
1991	234	175	3,271	12,317	238
1992	235	105	1,528	19,586	260
1993	144	109	1,308	20,872	564
1994	121	104	1,484	15,026	550
1995	88	50	393	10,757	200
1996	85	79	893	17,983	386
1997	78	44	445	29,929	163
1998	129	146	1,452	16,363	825
1999	198	92	1,366	18,908	771
2000	250	178	1,894	16,357	636
2001	235	88	1,083	21,269	767
2002	322	94	1,580	17,177	608
2003	320	137	1,299	24,972	1,053

자료노동부, 산업자원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98년이후 6년 동안 매년 16,000억원이상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분규·고손실로 인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 순위는 우리의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3년 세계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59개국 중 35위이나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보다 훨씬 낮은 59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표 Ⅳ-1-24> 노사관계의 국가 경쟁력 순위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 국	25	29	41	43	46	44	46	47	59
일 본	3	3	4	10	3	8	5	10	5
대 만	17	16	20	15	17	16	15	16	14
싱 가 폴	8	4	6	4	1	1	1	1	1
홍 콩	12	15	15	9	11	11	10	13	7
말레이시아	21	10	7	16	12	13	19	7	12
조사대상국가수	48	46	46	46	47	47	49	49	59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각 연도

한편, 사용자는 불법 노사분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03년의 불법 노사분규 건수는 29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며, 가압류 건수 및 금액은 17건, 15,027백만원으로 '02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는 점차 노사 및 노정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부상되었다.

<표 Ⅳ-1-25>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구 분		'00	'01	'02	'03	계
가압류 신청	기업수(개소)	17	17	30	17	81
	금 액(백만원)	23,059	38,165	68,781	15,027	145,032
손해배상 청구	기업수(개소)	15	23	25	16	79
	금 액(백만원)	16,498	22,781	18,481	11,539	69,299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월에는 68개 업종별 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의 산별노조화 및 산별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6월에는 노사관계 테스크포스와 장관 자문단을 구성하여 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7월에는 총력 노사분규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노사관계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부내 노사담당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에는 노사관계 실태파악을 위하여 유한킴벌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산업평화를 위한 경제계 협조방안", "금속산업연맹 파업 관련 산업계 파급 영향 및 대책" 등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4월9월에는 노동관계법의 산업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과 노사분쟁처리제도의 개선방안"의 용역을 실시하였다. 근로시간단축법안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 조정 등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정부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노사관계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구성시 사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될 무렵인 7월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과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부에 산자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를 9월 4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노사정위원회는 독회 및 워크숍을 거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이 노사분규의 예방보다는 사후조정에 치중한 감이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9월에 정책기획위원회에 노사관계법·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관련해서는 당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노사는 그 원인과 상황인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해법에 대해 매우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가 2001년 7월 설

치되었고 노사정위원회는 2년간의 논의를 일단 종결하고 논의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노동부는 11월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입법의 일환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산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산자부는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낮추지 않고 비정규직의 획일적인 보호만을 위한 대안 도출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함께 고려하는 등 비정규직의 제도개선은 경제질서와 법규범의 합리적 조화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토록 하는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전반적인 고용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는 2003년도 하반기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대 이슈중의 하나로, 사용자로서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수단이었다. 노동계는 손배·가압류를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손배·가압류 전면 취하 및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노동부는 근로자 급여채권 압류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민사집행법 개정, 노조재산 중 조합활동에 필요한 부분(1/3)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 조합비 일부 압류금지 규정 신설,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신원보증법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산자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이 신원보증인까지 미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퇴직금 및 그 성질을 가진 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나 노조재산의 일부 압류금지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안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상당부분 산자부 입장을 반영하였다.

한편, 총력 노사분규 예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담당관제를 운영

하고 각종 포상시 노사관계를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170개 세부 업종에 대한 노동생산성을 측정·발표하였다.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변화와 임금증가율을 보면 지난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제조업은 통신장비 등 IT산업분야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군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섬유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증가율이 4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임금증가율을 보면 철강산업을 제외하고는 업종간 큰 편차가 없이 대체로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업종별로 발생한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임금 인상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섬유, 가죽가방신발, 비철금속, 철강 등 업종은 생산성증가율 대비 높은 임금인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하여 비용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은 단위노동비용이 연평균 각각 7.4, 1.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용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노동생산성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화합물, 제1차 철강 등의 업종들이 임금 인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죽가방신발, 제1차 비철금속 업종 등의 경우 생산성증가율은 낮은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비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앞으로는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적절히 반영하여 기업의 비용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노사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협약” 등 합리적인 임금결정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Ⅳ-1-26> ‘99-’02년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동향

(단위 : 연평균 증가율 %)

	1인당 피용자 보수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제조업 전체	9.2	4.5	4.6
섬유제품	8.0	2.5	5.5
가죽가방신발	9.9	5.4	5.6
화합물 및 화학제품	9.0	6.0	3.2
제1차 철강	16.0	6.3	9.3
제1차 비철금속	9.6	2.8	6.7
기계 및 장비	8.9	6.9	2.0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8.7	1.9	6.6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4	20.6	-7.4
자동차 및 트레일러	9.9	11.3	-1.1
기타 운송장비	8.8	2.8	6.3

주 1)노동생산성 : 피용자 1인당 불변부가가치
2)단위노동비용 : 총피용자보수/불변부가가치

1990년대 들어 우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동향은 업종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식·정보화 확산과 전반적인 산업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산출증가와 노동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섬유, 생활 등의 업종은 제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생산성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기전자, 조선 등의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의 전반적인 비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1-27> '00년도 노동생산성 관련지표 비교

(단위전년대비 증가율 %)

업 종	노동생산성 · 임금(실질)			노동생산성 · 임금(명목)		
	노동생산성 (A)[1]	실질임금 (B)	A-B	노동생산성 (A)[2]	명목임금 (B)	A-B
제조업 전체	8.9	5.9	3.0	7.2	8.8	-1.6
섬유제품	4.5	5.3	-0.8	2.5	8.1	-5.6
가죽가방신발	-10.8	4.3	-15.1	-6.5	7.1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17.5	7.1	10.4	16.4	10.0	6.4
제1차 철강	5.2	7.6	-2.4	8.5	10.5	-2.0
제1차 비철금속	2.1	10.4	-8.3	-0.9	13.4	-14.3
기계 및 장비	6.7	4.8	1.9	5.6	7.7	-2.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2	4.5	-2.3	0.5	7.3	-6.8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45.1	9.1	36.0	17.2	12.0	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	0.6	1.8	2.4	3.3	-0.9
기타 운송장비	9.8	4.9	4.9	5.4	7.8	-2.4

주1) 노동생산성 : 피용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
주2) 노동생산성 : 피용자 1인당 경상부가가치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및 추진계획

가. 2004년도 노사관계 전망

2003년의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산별노조의 시기집중 파업, 분신정국의 형성과 노동계의 과격투쟁 심화 등 여러 현안들을 제기하고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도 새로운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노동계는 2004년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인사의 원내 진출을 겨냥하여 활발한 정치투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월까지는 임단협 관련 투쟁보다는 정치투쟁과 법·제도 개선 투쟁이 중심을 이루고 4월 총선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우선 근로시간단축관련 개정법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임단협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계는 2004년에도 산별노조의 확대 산별교섭을 확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비정규직 관련 투쟁,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저지 투쟁 등을 주요 투쟁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법·제도 개선 쟁점에 대해서는

첫째, 노동계의 법·제도 개선 투쟁과 공세적 투쟁양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을 개악으로 단정짓고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최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요청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노동계에서는 합의없는 정부 단독입법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활용가능한 다양한 노사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대화와 설득, 조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차가 매우 커서 원만한 합의형성이 어려울 듯하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경영계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상시적 활용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현재 제출된 공익위원안이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보호를 추진하되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시장원리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최저임금(최저생계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퇴직연금제에 대한 입법은 총선이후로 미루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제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법정퇴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기존 노사의 반대와 더불어 법안처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다음으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의 영향으로 노동계의 산별 추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요구는 2004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공공연맹, 화섬연맹, 사무금융연맹 등에서도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2003년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이 대부분 부결된 결과 2004년에는 기존의 산별노조의 세를 확대하는 정책과 대공장노조를 자동차와 조선으로 구분하여 분과별 집단화를 추진 중이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이 금년도의 주요 교섭이슈가 되고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조정 문제가 금속노조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임금은 대체로 2003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노동계는 경영참여 요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단체협약에서의 조율을 둘러싼 사업장 단위의 노사갈등,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감각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 2004년도 추진 계획

⑴ 총력 노사분규 예방체제의 구축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큰 자동차, 기계, 부품 등 7개 업종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업종별 담당과, 단체 및 주요 기업의 노무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노사담당관제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노사담당관은 해당 업종의 노사분규 발생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분규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분규발생시에는 업종별단체협의회, 경제단체협의회 등의 민과 관이 합동으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간 이견 청취, 설명회 개최와 건의사항 등을 해결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⑵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공표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를 발표하여 업종별로 생산성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임금인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생산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01년부터 세분류 단위까지 단위노동비용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시현성 격차와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성 추이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업종별 산업경제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업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IT, BT 등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생산성 분석을 통해 주요 업종별 임금 책정에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⑶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기반 조성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자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사관계의 신조류는 분배위주의 대결과 투쟁관계에서 경쟁력 지향 중심의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분배위주의 노사관계는 노사가 대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이미 생산된 파이의 분배를 위한 과거 지향적인 교섭으로서 이에 기초한 노사관계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198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노사관계는 경쟁력 지향적이고 이는 노사대립에서 노사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해 노사가 공존·공영의 동반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열린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인적자원관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기업조직자체를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전환시키고 권한을 이양하는 등 민주적인 경영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과 더불어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삼아 교육훈련과 학습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기업의 생산성·품질·서비스 향상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안전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기업성장의 책임있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04년에는 생산성향상, 신노사문화

교육 확대, 전직지원, 투명경영 유도 및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선 추진 등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향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노사문화의 정착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첫째,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혁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에 의한 생산성진단 및 우수 혁신정보를 제공하고 경영혁신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생산성협약 임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성향상 성과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되도록 생산성협약 임금제 모델을 주요 시범업종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합리적인 성과배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노사간 생산적 협력이 기대된다. 이로써 생산성협약 임금제도를 2005년까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노사문화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2002년 하반기에 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경영혁신교육 외에 열린경영 등 신노사문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노사협력시대에 부응한 상생의 경영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넷째, 중소·중견기업의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지식, 기술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33억원(정부예산 20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500개 기업에 대해 교육훈련 진단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섯째, 산업인력 전직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다.

경총에 설치 운영중인 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센터에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무전환 교육서비스, 기술창업, 재취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인구직을 위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상담센터를 확충하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노사 신뢰경영지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노사협의회 운영, 노무조직 실태 등 노무관리의 제반사항을 계량화하여 과학적인 노사관리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범업종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윤리경영의 실천시스템 및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윤리경영의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정보의 제공 등 투명경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경영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지역산업균형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째, 전문연구기관에 기업경영환경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노사부문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⑷ 노사관계법·제도의 개선 추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효율적인 시장인프라로서의 노동법, 공정한 시장인프라로서의 노동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노사관계제도 부문의 개선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처벌의 비대칭성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성실교섭의무를 노사 양측에 요구하면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노조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 등 권리남용의 우려가 있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쟁의행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소신있는 의사표현이 곤란하다. 따라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때에 법정화된 투표용지의 사용과 함께 우편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파업여부의 의사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파업이 파괴적으로 변질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노조의 쟁의권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물론 적법한 파업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의 경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 과다한 노조전임자제도 개선, 복수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쟁의행위의 대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제도 등도 개선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제도부문의 경우 경영상 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선정하여, 6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정리해고의 요건은 오히려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정리해고의 사전통보기한을 줄이고 인력조정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개선과제이다.

법정퇴직금제도는 기업경영에 많은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봉제 도입의 걸림돌이 되므로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를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의 재설계를 통하여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업연금제도는 노사의 협의하에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재량근로제 확대 등이 개선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산자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계부처회의를 통하여 노동관계법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노동시장의 공정한 규범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제8절 생산적·협력적 신노사문화의 정착

산업혁신과 서기관 박인규

1. 국가발전 전략과 노사문화

세계화·지식기반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시장으로 변모하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단일시장에서 경쟁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발전원리도 달라지고 한 나라의 국부와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이 보유하는 물적 자원의 양과 질이 아니라 지식·정보·기술 등 지적 자산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지적 자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지식기반 정보화시대의 국가와 기업발전의 핵심전략은 지식·정보·기술의 생산 주체인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이 보람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노사문화는 변해야 한다.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지시와 통제위주의 경영관행 등 종전의 대립과 갈등관계에서 탈피하여 노사의 의식과 행태,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시대변화에 맞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관계의 불안이 계속될 경우 경제 회생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노사신뢰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고, 법제도 관련 현안 쟁점에 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나 지역에서 최고가 아닌 세계적으로 최고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된 오늘날 품질이나 가격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여세를 몰아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사 당사자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노사정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

2. 2003년도 노사관계의 전개 및 평가

가. 2003년도 노사관계 개관

'03년도 노사관계의 기류변화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방향은 "대화와 타협"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조의 강조는 노동계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더라도 용인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노동정책 결정라인에 노동계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되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공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노동계 내부에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정부 초기의 정책방향은 연초 두산중공업 파업, 철도노조와의 4.20 노정합의, 조흥은행 파업 발생 등의 상반기를 지나면서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이해와 접목되어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법과 원칙의 병행 필요성, 대기업·강성노조운동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철도구조개혁법안 국회 상정을 계기로 시작된 6월28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와 구속, 화물연대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노정간의 관계가 오히려 크게 경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갈등

향후 노사관계의 큰 획을 그을만한 굵직한 법·제도 개선사항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한 노사정간 갈등도 심화되었다

첫째, 2003년 상반기 중에는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합의사항 중 하나로 5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근로시간단축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의 폐지, 연차휴가의 조정(15일~25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3월 확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 할증률 25% 적용, 생리휴가의 무급화, 사업장 규모별로 7년간 단계적 실시, 포괄적 임금보전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노사의 합의없이 정부안 중심으로 법제화가 된 만큼 향후 임금보전, 휴가일수 조정 및 단계적 실시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정규직 보호의 법제화가 무산된 점을 들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는 5월 23일 그동안 논의되었던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된 공익위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주요 내용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

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공익위원안의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의 경우 일정기간(2년) 동안의 사용은 허가하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사용을 불허하고, 파견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등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허용업종에 대하여는 노사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불법파업과 관련 손해배상 및 가압류제 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들 수 있다.

1월의 두산중공업 근로자 분신 및 10월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 자살 등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에서 계속된 노동계의 자살 및 분신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도 개선과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노동계는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가 협소한 현 상황에서 사용자가 손배 및 가압류를 노조탄압과 활동제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폐지 및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넷째, 공무원 노조법 제정을 유보한 점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일부(협약체결권)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동2권에 대한 허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나 노동3권의 완전보장을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반대로 국무회의에서 유보,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평등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중소기업의 반발로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양 제도가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여섯째, 퇴직연금제 법안의 통과를 유보한 점이다.

경영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퇴직금제의 전 사업장 확대를 우선시 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일곱째,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의견 대립이다. 2003년 5월10일 출범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제도 개선안을 11월초에 완성하였다. 근로자의 단결권의 확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단체협약 및 교섭제도의 개선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및 조정(알선)제도의 신설 등 조정기능의 활성화,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구제제도의 효율화, 사업의 양도·양수 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 및 노사관계 규율체계의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한 노사의 의견대립이 첨예하여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 산별교섭의 진전과 비정규직 조직화

노사관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산별교섭이 크게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일부 소산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교섭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3년 나타난 양상은 확연히 달랐다. 연초부터 참여정부의 중층적 교섭구조에 대한 강조, 산별메뉴얼 발간,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 제기 등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실제로 금융노조와 은행연합회간, 금속노조와 관련사간 중앙교섭이 성사되는 등 실질적인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영계가 기존에 제기해 왔던 이중·삼중교섭의 폐해, 집단행동의 증가 등 산별교섭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정되면서, 해당기업들이 산별교섭에 대해서 갖는 반감은 증폭되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체 노조가 중심이 된 금속노조가 시기집중 파업 등을 통해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 40시간제 실시”, “임시직 사용제한” 등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면서, 중앙교섭을 역제의하였던 사용자들 사이에서조차 사용자 대표에 대한 위임철회 등 논란이 야기되고, 산별교섭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확산이 해당기업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2003년도 노사분규의 약 50%가 산별노조에서 발생하는 등 국가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산별을 크게 강화하려는 노동계와 큰 마찰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28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지회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제조업내 하청기업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라. 사망・분신정국의 형성

2003년도의 노사관계의 불안정도는 이른 바 "사망·분신정국"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연초 두산중공업에 이어 하반기 들어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의 노조간부들이 잇따라 자살·분신하였고 노동계는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가 계속되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에나 있었던 분신이 10여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재연되고 1990년대말 사라졌던 화염병, 쇠파이프가 다시 집회 현장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업현장의 극단적 행위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형성된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과 불법파업·불법행위의 만연, 분쟁조정시스템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마.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증가

2003년은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노사정간의 관계가 크게 경색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노사간의 입장대립,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산별교섭과 관련한 갈등, 양대노총간의 경쟁가열 등으로 발생한 2003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20건으로 전년도 322건과 비슷하다.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0년도의 322건에 근접한 수치로 300건을 상회한 수치가 전년에 이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분규 참가자수는 137,241명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데 반해 근로손실일수는 1,298,663명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가 조기 타결되고 전면파업보다는 부분·파상파업 등으로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산별주도의 파업이 빈번하였으며, 극단적인 행위가 많아 파업 참가자수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전면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

가된다. 또한 제조부분의 노사분규 건수가 167건으로 전년의 136건보다 늘어남으로써 그 파급효과는 더 크게 체감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02년 17,177억원보다 45.3%가 증가한 24,972억원 발생하고, 수출차질액도 '02년 608백만달러보다 73.2%가 증가한 1,053백만달러를 시현하였다.

분규발생 원인별 생산차질액을 보면 임·단협이 23,859억원(95.5%), 구조조정 389억원(1.6%), 노동법제도 개선 63억원(0.0%), 기타 721억원(0.5%)으로 임·단협, 구조조정 관련 노사분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1-12〉 노사분규 주요 지표 추이

연 도	발생건수	분규참가자수 (천명)	근로손실일수 (천일)	생산차질액 (억원)	수출차질액 (백만달러)
1987	3,749	1,262	6,947	27,782	537
1988	1,873	293	5,401	32,020	732
1989	1,616	409	6,351	41,995	1,363
1990	322	134	4,487	14,387	314
1991	234	175	3,271	12,317	238
1992	235	105	1,528	19,586	260
1993	144	109	1,308	20,872	564
1994	121	104	1,484	15,026	550
1995	88	50	393	10,757	200
1996	85	79	893	17,983	386
1997	78	44	445	29,929	163
1998	129	146	1,452	16,363	825
1999	198	92	1,366	18,908	771
2000	250	178	1,894	16,357	636
2001	235	88	1,083	21,269	767
2002	322	94	1,580	17,177	608
2003	320	137	1,299	24,972	1,053

자료 :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98년이후 6년 동안 매년 16,000억원이

상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분규·고손실로 인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국제경쟁력 순위는 우리의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3년 세계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59개국 중 35위이나 노사관계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보다 훨씬 낮은 59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표 III-1-13〉 노사관계의 국가 경쟁력 순위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 국	25	29	41	43	46	44	46	47	59
일 본	3	3	4	10	3	8	5	10	5
대 만	17	16	20	15	17	16	15	16	14
싱 가 폴	8	4	6	4	1	1	1	1	1
홍 콩	12	15	15	9	11	11	10	13	7
말레이시아	21	10	7	16	12	13	19	7	12
조사대상국가수	48	46	46	46	47	47	49	49	59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각 연도

한편, 사용자는 불법 노사분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03년의 불법 노사분규 건수는 29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며, 가압류 건수 및 금액은 17건, 15,027백만원으로 '02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불법 노사분규와 관련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는 점차 노사 및 노정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부상되었다.

〈표 III-1-14〉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구 분		'00	'01	'02	'03	계
가압류 신 청	기업수(개소)	17	17	30	17	81
	금 액(백만원)	23,059	38,165	68,781	15,027	145,032
손해배상 청 구	기업수(개소)	15	23	25	16	79
	금 액(백만원)	16,498	22,781	18,481	11,539	69,299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바.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월에는 68개 업종별 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의 산별노조화 및 산별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6월에는 노사관계 테스크포스와 장관 자문단을 구성하여 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7월에는 총력 노사분규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노사관계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부내 노사담당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에는 노사관계 실태파악을 위하여 유한킴벌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산업평화를 위한 경제계 협조방안", "금속산업연맹 파업 관련 산업계 파급 영향 및 대책" 등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4월~9월에는 노동관계법의 산업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의 패러다임 전환과 노사분쟁처리제도의 개선방안"의 용역을 실시하였다. 근로시간단축법안과 관련해서는 시행시기 조정 등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정부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도 하였

다.

노사관계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에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구성시 사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논의될 무렵인 7월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과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부에 산자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연구결과를 9월 4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노사정위원회는 독회 및 워크숍을 거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이 노사분규의 예방보다는 사후조정에 치중한 감이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9월에 정책기획위원회에 노사관계법·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관련해서는 당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노사는 그 원인과 상황인식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해법에 대해 매우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특위가 2001년 7월 설치되었고 노사정위원회는 2년간의 논의를 일단 종결하고 논의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노동부는 11월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입법의 일환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산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산자부는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낮추지 않고 비정규직의 획일적인 보호만을 위한 대안 도출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함께 고려하는 등 비정규직의 제도개선은 경제질서와 법규범의 합리적 조화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토록 하는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전반적인 고용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는 2003년도 하반기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대 이슈중의 하나로, 사용자로서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수단이었다. 노동계는 손배·가압류를 신종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손배·가압류 전면 취하 및 손배·가압류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노동부는 근로자 급여채권 압류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민사집행법 개정, 노조재산 중 조합활동에 필요한 부분(1/3)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 조합비 일부 압류금지 규정 신설,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신원보증법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산자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이 신원보증인까지 미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퇴직금 및 그 성질을 가진 급여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나 노조재산의 일부 압류금지에 대하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근골격계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법시행령·규칙 개정안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상당부분 산자부 입장을 반영하였다.

한편, 총력 노사분규 예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담당관제를 운영하고 각종 포상시 노사관계를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170개 세부 업종에 대한 노동생산성을 측정·발표하였다.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변화와 임금증가율을 보면 지난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제조업은 통신장비 등 IT산업분야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군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섬유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증가율이 4~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임금증가율을 보면 철강산업을 제외하고는 업종간 큰 편차가 없이 대체로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업종별로 발생한 노동생산성의 차

이는 임금 인상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섬유, 가죽가방신발, 비철금속, 철강 등 업종은 생산성증가율 대비 높은 임금인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하여 비용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와 자동차 업종은 단위노동비용이 연평균 각각 7.4%, 1.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용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노동생산성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화합물, 제1차 철강 등의 업종들이 임금 인상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죽가방신발, 제1차 비철금속 업종 등의 경우 생산성증가율은 낮은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비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앞으로는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을 적절히 반영하여 기업의 비용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노사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협약" 등 합리적인 임금결정 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I-1-15> '99-'02년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동향

(단위 : 연평균 증가율 %)

	1인당 피용자 보수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제조업 전체	9.2	4.5	4.6
섬유제품	8.0	2.5	5.5
가죽가방신발	9.9	5.4	5.6
화합물 및 화학제품	9.0	6.0	3.2
제1차 철강	16.0	6.3	9.3
제1차 비철금속	9.6	2.8	6.7
기계 및 장비	8.9	6.9	2.0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8.7	1.9	6.6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9.4	20.6	-7.4
자동차 및 트레일러	9.9	11.3	-1.1
기타 운송장비	8.8	2.8	6.3

주 1)노동생산성 : 피용자 1인당 불변부가가치
2)단위노동비용 : 총피용자보수/불변부가가치

1990년대 들어 우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동향은 업종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식·정보화 확산과 전반적인 산업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산출증가와 노동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섬유, 생활 등의 업종은 제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생산성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전기전자, 조선 등의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의 전반적인 비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16〉 '00년도 노동생산성 관련지표 비교

(단위 : 전년대비 증가율 %)

업 종	노동생산성·임금(실질)			노동생산성·임금(명목)		
	노동 생산성(A)[1]	실질임금 (B)	A-B	노동 생산성(A)[2]	명목임금 (B)	A-B
제조업 전체	8.9	5.9	3.0	7.2	8.8	−1.6
섬유제품	4.5	5.3	−0.8	2.5	8.1	−5.6
가죽가방신발	−10.8	4.3	−15.1	−6.5	7.1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17.5	7.1	10.4	16.4	10.0	6.4
제1차 철강	5.2	7.6	−2.4	8.5	10.5	−2.0
제1차 비철금속	2.1	10.4	−8.3	−0.9	13.4	−14.3
기계 및 장비	6.7	4.8	1.9	5.6	7.7	−2.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2	4.5	−2.3	0.5	7.3	−6.8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45.1	9.1	36.0	17.2	12.0	5.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	0.6	1.8	2.4	3.3	−0.9
기타 운송장비	9.8	4.9	4.9	5.4	7.8	−2.4

주1) 노동생산성 : 피용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

주2) 노동생산성 : 피용자 1인당 경상부가가치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및 추진계획

가. 2004년도 노사관계 전망

2003년의 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산별노조의 시기집중 파업, 분신정국의 형성과 노동계의 과격투쟁 심화 등 여러 현안들을 제기하고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도 새로운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노동계는 2004년 4월 총선에서 노동계 출신 인사의 원내 진출을 겨냥하여 활발한 정치투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월까지는 임단협 관련 투쟁보다는 정치투쟁과 법·제도 개선 투쟁이 중심을 이루고 4월 총선이 끝난 이후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우선 근로시간단축관련 개정법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임단협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계는 2004년에도 산별노조의 확대 산별교섭을 확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비정규직 관련 투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저지 투쟁 등을 주요 투쟁계획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법·제도 개선 쟁점에 대해서는

첫째, 노동계의 법·제도 개선 투쟁과 공세적 투쟁양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내용을 개악으로 단정짓고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최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요청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노동계에서는 합의없는 정부 단독입법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활용가능한 다양한 노사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대화와 설득, 조율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차가 매우 커서 원만한 합의형성이 어려울 듯하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경영계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상시적 활용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현재 제출된 공익위원안이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보호를 추진하되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시장원리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제도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최저임금(최저생계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공무원 노동기본권 및 퇴직연금제에 대한 입법은 총선이후로 미루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제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법정퇴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기존 노사의 반대와 더불어 법안처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다음으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의 영향으로 노동계의 산별 추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의 산별교섭 요구는 2004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공공연맹, 화섬연맹, 사무금융연맹 등에서도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2003년 대공장노조의 산별전환이 대부분 부결된 결과 2004년에는 기존의 산별노조의 세를 확대하는 정책과 대공장노조를 자동차와 조선으로 구분하여 분과별 집단화를 추진 중이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이 금년도의 주요 교섭이슈가 되고 제조업 공동화 등 구조조정 문제가 금속노조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임단협과 관련해서는 임금은 대체로 2003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노동계는 경영참여 요구,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단체협약에서의 조율을 둘러싼 사업장 단위의 노사갈등, 노동계의 정치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감각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 2004년도 추진 계획

(1) 총력 노사분규 예방체제의 구축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큰 자동차, 기계, 부품 등 7개 업종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업종별 담당과, 단체 및 주요 기업의 노무담당자 등이 참여

하는 노사담당관제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노사담당관은 해당 업종의 노사분규 발생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분규예방대책을 마련한다. 분규 발생시에는 업종별단체협의회, 경제단체협의회 등의 민과 관이 합동으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간 이견 청취, 설명회 개최와 건의사항 등을 해결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 공표

업종별 노동생산성지수를 발표하여 업종별로 생산성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임금인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생산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01년부터 세분류 단위까지 단위노동비용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시현성 격차와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성 추이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업종별 산업경제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업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IT, BT 등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생산성 분석을 통해 주요 업종별 임금 책정에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3)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기반 조성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자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사관계의 신조류는 분배위주의 대결과 투쟁관계에서 경쟁력 지향 중심의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분배위주의 노사관계는 노사가 대등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이미 생산된 파이의 분배를 위한 과거 지향적인 교섭으로서 이에 기초한 노사관계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1980년대 이후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노사관계는 경쟁력 지향적이고 이는 노사대립에서 노사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 신뢰하고 화합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해 노사가 공존·공영의 동반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자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열린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인적자원관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기업조직자체를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전환시키고 권한을 이양하는 등 민주적인 경영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과 더불어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삼아 교육훈련과 학습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기업의 생산성·품질·서비스 향상 그리고 인적자원개발과 산업안전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기업성장의 책임있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04년에는 생산성향상, 신노사문화 교육 확대, 전직지원, 투명경영 유도 및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선 추진 등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노사문화의 정착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첫째,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혁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에 의한 생산성 진단 및 우수 혁신정보를 제공하고 경영혁신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생산성협약 임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성향상 성과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되도록 생산성협약 임금제 모델을 주요 시범업종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합리적인 성과배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노사간 생산적 협력이 기대된다. 이로써 생산성협약 임금제도를 2005년까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노사문화 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2002년 하반기에 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경영혁신교육 외에 열린경영 등 신노사문화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노사협력시대에 부응한 상생의 경영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넷째, 중소·중견기업의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지식, 기술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33억원(정부예산 20억원)을 투

입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500개 기업에 대해 교육훈련 진단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섯째, 산업인력 전직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다.

경총에 설치 운영중인 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센터에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무전환 교육서비스, 기술창업, 재취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인구직을 위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상담센터를 확충하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노사 신뢰경영지표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노사협의회 운영, 노무조직 실태 등 노무관리의 제반사항을 계량화하여 과학적인 노사관리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범업종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윤리경영의 실천시스템 및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윤리경영의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정보의 제공 등 투명경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경영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지역산업균형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째, 전문연구기관에 기업경영환경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노사부문의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4) 노사관계법·제도의 개선 추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효율적인 시장인프라로서의 노동법, 공정한 시장인프라로서의 노동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노사관계제도 부문의 개선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처벌의 비대칭성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성실교섭의무를 노사 양측에 요구하면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노조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 등 권리남용의 우려가 있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쟁의행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소신있는 의사표현이 곤란하다. 따라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때에 법정화된 투표용지의 사용과 함께 우편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파업여부의 의사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파업이 파괴적으로 변질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노조의 쟁의권 보호와 더불어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불법파업의 경우에는 물론 적법한 파업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 과다한 노조전임자제도 개선, 복수노조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쟁의행위의 대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제도 등도 개선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제도부문의 경우 경영상 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선정하여, 6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정리해고의 요건은 오히려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정리해고의 사전통보기한을 줄이고 인력조정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문제도 개선과제이다.

법정퇴직금제도는 기업경영에 많은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봉제 도입의 걸림돌이 되므로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를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의 재설계를 통하여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업연금제도는 노사의 협의하에 개별기업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재량근로제 확대 등이 개선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산자부는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계부처회의를 통하여 노동관계법이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노동시장의 공정한 규범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